

연구논문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 재설계*

이 환 범**

- I. 서 론
- II. 노인취업 관련 정부지원 기능 실태 및 외국사례 분석
- III. 조사설계 및 분석
- IV.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즉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부처별 지원기능의 적합성, 통합 대상 기능, 타 부처 이관 대상 기능, 확대 대상 기능, 그리고 축소 대상 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중점 분석하였다. 더불어 선진국 관련사례 연구를 위해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기능들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심층·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기능체계의 효율화 차원에서 정부부처별 기능분담 재조정 및 지원기능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기능 적합성 평가, 기능통합, 정부지원 기능 재설계]

I. 서 론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약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6).¹⁾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변화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前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8-328-B00090).

** 영남대학교 교수(hblee@yumail.ac.kr).

1)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연령구조를 갖는 국가는 고령화 사회이다.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를 예측·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정부 대응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예전에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불안정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세대 또한 감내해야 할 고통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중장기 인구구조 예측분석, 사회·경제 환경변화 예측, 저출산·고령화 및 미래 사회변동 관련 주요 정책 대응방향 설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 고령자 노후소득·건강·주거·교통·여가·문화정책 수립,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전망 및 인적자원의 대응적 활용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실버산업 등 신산업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노동력 공급의 감소, 경제 활력의 저해,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지광수, 2005; 김옥희, 200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노인관련 정책수준이 미흡하고 노인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빈곤, 질병, 역할상실, 여가, 그리고 사회적 소외와 같은 각종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기초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들이 노인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규모 및 지원기능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장옥수, 2003). 그리고 정부의 고령화 관련 노인인력활용정책이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화 관련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이 비체계적·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박기훈, 2004; 박석희, 2007). 이러한 문제인식에 비추어 볼 때, 우선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기능 및 사업들

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부처별 분담 기능체계의 근본적 재조정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유사 기능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고령화의 진행추세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예측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에, 노인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 관련 기능들의 효과성 또는 문제점 분석에 따른 정부기능 재설계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제공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정부부처별 지원 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다각적인 심층 분석과 선진 국가별 관련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노인취업 관련 정부지원 기능 실태 및 외국사례 분석

1. 노인취업의 중요성

고령화 사회의 의미는 단순히 사회·인구학적 관점에서 사회노인계층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에 있기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구조에 많은 변화를 발생·수반한다는 데 있다. 즉 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사회 전체의 고령화는 곧 노동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유발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시 사회 고령화가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 원인변수로 작용함을 우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사회노인계층은 결국 경제적 피부양자로서 국가 및 사회적 부담 또한 크게 증대하게 하는 주된 역기능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가 연장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는 이전의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세

게 고령화와 연계하여 노인이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에 종사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모형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Rowe & Kahn, 1997). 성공적 노화모형이란 소품종 다양(각)화 및 고품질을 도모하는 현대 기업의 성장지향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순 노동력보다는 숙련 노동력의 활용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서 전문성과 기술력 그리고 경험 등을 두루 갖춘 노인의 취업기회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질 것이라는 예측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Shephard, 2000).

고령자 취업은 여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자 취업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부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고령자 취업은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보장비용을 감소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임우석, 2008). 셋째, 고령자 취업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취업은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건강유지와 여가시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최성재·장인협, 2002). 끝으로, 노인취업은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뿐더러 가족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노인취업은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통적 노부모 부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영숙, 2007).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창출은 보충적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노인의 정체성 상실, 사회로부터 소외감, 삶의 무기력함으로부터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시적·포괄적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취업 관련 정부지원 기능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같은 6개 부처가 노인취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는 고령화 관련 정부지원기능 중에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기능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는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기능으로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지식경제부는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기능으로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화 관련 정부지원기능 중에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기능으로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 제도운영과 노인관광전문가 양성을 주관하고 있다.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에는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를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고령화 관련 정부지원기능 중에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기능으로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부처별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현행 정부지원 기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노인취업 및 일자리 관련 정부부처별 지원기능

정부 부처	주요 지원기능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 창출
노동부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지식경제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농림수산식품부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
행정안전부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한편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부부처 지원기능 수행 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주된 내용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취업 및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노인취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취업센터,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 노인복지회관 및 시

니어클럽 등과 관련된 노인취업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인력개발기능은 여성부, 그리고 노인대학은 행정안전부가 각자 운영하고 있어 부처별 상호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둘째, 현행 노인취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재원²⁾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각 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일부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연계성 미흡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미흡으로 재정운용 성과 역시 저조하다는 점이다(박석희, 2007; 미래사회연구원, 2007).

끝으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고령화 대응 현업조직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새로마지플랜 2010」이 발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현재 각 광역 시·도에서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조직하거나 임시적인 TF팀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추진 조직체계의 구축 및 사업 활동은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비해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지자체 추진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정치경제 이슈, 국책사업, 지역개발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들의 노인취업 및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외국사례 분석

1) 스웨덴

스웨덴은 1992년 에델개혁(Adelreformen)을 통해 고령화 관련 취업, 보건의료,

2) 현재 고령화 영역의 대응 예산 비중은 저출산 영역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에서 노인복지 예산의 비중은 비교적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계 하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에텔개혁은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취업프로그램, 취미오락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파트타임 제도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박재간 외 2008).

스웨덴의 전반적인 고령화 관련 복지행정지원체계는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승희 외, 2007). 첫째,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장 업무는 보건사회부(Dept.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내의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이 관장한다. 사회보장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보장지청(Social Insurance Board)과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보장사무소(Insurance Office)를 두고 있는데 사회보장사무소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 서비스를 일임하는 보건사회부 내의 독립기관인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이 있다. 보건서비스 업무는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복지서비스 업무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셋째, 고용보험 업무는 실업보험청(Swedish Unemployment Insurance Board)에서 총괄하며, 보험청 산하에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실업보험금고(Unemployment Insurance Fund)와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시장청(National Labour Market Board)이 있다. 노동시장청은 직업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에 20개의 노동청(Labour Board)과 직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에 325개의 고용사무소(Public Employment Office)를 두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노인빈곤층 비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연금제도가 다층구조로 완비되어 소득보전 수단으로서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욕구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은퇴 후 실비보상 수준의 유료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취업 및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는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이 유일하다. 사업은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내 고령노동자 계획부(Division of Older Worker Programs)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위탁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은 산림청이나 히스패닉, 아시안, 흑인 및 인디언 노인연합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비영리기관으로 총 13개가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56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655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주·지방 정부가 사업을 수행할 때 민간부문의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연방정부는 분기별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3) 영국

영국은 고령화의 대응책이 각기 서로 다른 분야별로 분산되었으나, 1990년대 말 이후로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응집되고 통합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 부처인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³⁾을 중심으로 뉴딜 50플러스 프로그램⁴⁾을 통하여 고령자 고용·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Opportunity Age’ 라는 고령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소개소와 노인복지공장을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소개소는 노동연금부와 민간복지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연금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는 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민간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는 기업에서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3) 노동연금부는 장관을 보좌하는 조직과 집행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5개의 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급여청(Benefit Agency)은 각종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급여청 산하에는 전국 125개 지역구(districts)에 약 500개의 지방사무소(local office)를 두고 있다.

4) 뉴딜 50플러스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 제도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노동연금부의 지원 및 감독 하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노동연금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이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설립되며,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은퇴한 노인을 위한 작업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설립 및 운영예산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근무자를 숙련공, 반숙련공, 비숙련공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주비율은 공공부문이 더 많은 편이나, 은퇴노인 1인당 총 근무시간은 민간부문이 더 많은 편이다.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는 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이나, 민간부문에서는 퇴직노인들에게 다양한 전문분야에 비상근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dwp.gov.uk>).

4) 일본

일본은 고령화 급진전 이후,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보장예산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고령자 취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고령자 고용·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집행은 실버인재센터, 고령자사업단, 고령자협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여 담당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전국 시정촌에 1,33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적·단기적인 취업을 주로 알선하고 있다. 고령자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도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일본의 100여개 주요 도시에서 40세 이상의 관리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에 기업에게 연간 30~4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협동조합은 1995년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주도하여 설립하였으며, 현재 전국 30여개 도도부현에 설치되

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주비율은 민간이 더 많은 편이며, 고령자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에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노동부, 2008).

III. 조사설계 및 분석

1. 조사설계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취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30부를 배부하여 413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치나 무성의한 응답으로 연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24부를 제외한 389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노인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기능의 부처 적합성,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타 부처 이관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확대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그리고 축소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과 같은 6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이들 설문조사 내용과 연계하여 정책기획 위주의 중앙공무원 그리고 일선 현장 위주의 지방공무원간 유의미한 인식차이 분석⁶⁾결과를 통하여 정부부처별 추진사업의 조정 및 지원기능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반영하였다.

5) 설문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80명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 고령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250명 총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순위,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이관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기능 확대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기능 축소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경우에는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차이 분석을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부지원 기능의 부처 적합성(부적합성)의 경우에는 등간척도이기 때문에 공무원 소속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을 위해 t-test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중앙정부 공무원 164명(42.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5명(57.8%)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 229명(58.9%), 여자 160명(41.1%)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20대 7명(1.8%), 30대 95명(24.4%), 40대 195명(50.1%), 50대 92명(23.7%)으로 조사되었다. 현 부서 근무기간에 있어서 1년 미만 77명(19.8%), 1~2년 84명(21.6%), 3~4년 90명(23.1%), 5~6년 53명(13.6%), 7년 이상 85명(21.9%)으로 파악되었다. 직급의 경우에는 8급 43명(11.1%), 7급 136명(34.9%), 6급 49명(12.6%), 5급 125명(32.1%), 4급 36명(9.3%)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

1)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효과성 순위를 평가한 결과, 노인일자리 창출 103명(26.4%),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57명(14.7%),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44명(11.3%),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43명(11.1%),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41명(10.5%),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40명(10.3%),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25명(6.4%),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22명(5.7%),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14명(3.6%)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순위 평가

정부지원 기능	응답(%)	정부지원 기능	응답(%)
노인일자리 창출	103(26.4%)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22(5.7%)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43(11.1%)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41(10.5%)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44(11.3%)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25(6.4%)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57(14.7%)	고령층 정보화 교육	40(10.3%)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14(3.6%)	합계	389(100%)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순위 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 소속(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여부에 따른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순위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표 3〉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순위 차이분석

구분	χ^2	유의확률
공무원 소속(중앙정부 vs 지방정부) -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순위	23.535	.205

2) 정부지원 기능의 부처 적합성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 정부지원 기능이 해당 부처에서 담당·추진되는 것이 적합한 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전혀 적합하지 않다’ 47명(12.1%), ‘적합하지 않다’ 160명(41.1%), ‘보통이다’ 81명(20.8%), ‘적합하다’ 76명(19.5%), ‘매우 적합하다’ 25명(6.4%)으로 나타나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동부의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 18명(4.6%), ‘보통이다’ 80명(20.6%), ‘적합하다’ 233명(59.9%), ‘매우 적합하다’ 58명(14.9%)으로 나타나 노동부가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기능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의 적합성에 있어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 2명(0.5%), ‘적합하지 않다’ 12명(3.1%), ‘보통이다’ 91명(23.4%), ‘적합하다’ 233명(59.9%), ‘매우 적합하다’ 51명(13.1%)으로 나타나 노동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지식경제부의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전혀 적합하지 않다’ 18명(4.6%), ‘적합하지 않다’ 152명(39.1%), ‘보통이다’ 106명(27.2%), ‘적합하다’ 94명(24.2%), ‘매우 적합하다’ 19명(4.9%)으로 나타나 지식경제부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전혀 적합하지 않다’ 3명(0.8%), ‘적합하지 않다’ 51명(13.1%), ‘보통

이다' 77명(19.8%), '적합하다' 233명(59.9%), '매우 적합하다' 25명(6.4%)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적합성 평가결과에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 4명(1.0%), '적합하지 않다' 59명(15.2%), '보통이다' 87명(22.4%), '적합하다' 214명(55.0%), '매우 적합하다' 25명(6.4%)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전혀 적합하지 않다' 6명(5.6%), '적합하지 않다' 27명(25.2%), '보통이다' 31명(29.0%), '적합하다' 37명(34.6%), '매우 적합하다' 6명(5.6%)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의 경우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 25명(6.4%), '적합하지 않다' 128명(32.9%), '보통이다' 124명(31.9%), '적합하다' 105명(27.0%), '매우 적합하다' 7명(1.8%)으로 나타나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전혀 적합하지 않다' 26명(6.7%), '적합하지 않다' 145명(37.3%), '보통이다' 131명(33.7%), '적합하다' 76명(19.5%), '매우 적합하다' 11명(2.8%)으로 나타나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참조).

〈표 4〉 정부지원 기능의 부처별 적합성 평가

부처	지원기능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일자리 창출	47(12.1%)	160(41.1%)	81(20.8%)	76(19.5%)	25(6.4%)
노동부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	18(4.6%)	80(20.6%)	233(59.9%)	58(14.9%)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2(0.5%)	12(3.1%)	91(23.4%)	233(59.9%)	51(13.1%)
지식경제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18(4.6%)	152(39.1%)	106(27.2%)	94(24.2%)	19(4.9%)
문화체육 관광부	노인전담체육지도사· 체육지도자제도 운영	3(0.8%)	51(13.1%)	77(19.8%)	233(59.9%)	25(6.4%)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4(1.0%)	59(15.2%)	87(22.4%)	214(55.0%)	25(6.4%)
농림수산 식품부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22(5.7%)	135(34.7%)	112(28.8%)	98(25.2%)	22(5.7%)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25(6.4%)	128(32.9%)	124(31.9%)	105(27.0%)	7(1.8%)
행정안전부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26(6.7%)	145(37.3%)	131(33.7%)	76(19.5%)	11(2.8%)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정부부처 적합성(부적합성) 평가에 대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적합성과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적합성 그리고 유의수준 0.1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 적합성이 공무원 소속(중앙정부 vs 지방정부)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지원 기능은 공무원 소속여부에 따라서 적합성 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부지원 기능의 부처 적합성(부적합성) 차이분석

집단변수	검정변수	t	유의확률
공무원 소속 (중앙 vs 지방정부)	보건복지가족부-노인일자리 창출 간의 부적합성	.280	.780
	노동부-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간의 적합성	1.245	.216
	노동부-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간의 적합성	.869	.387
	지식경제부-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간의 부적합성	.876	.353
	문화체육관광부-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간의 적합성	2.633	.015
	문화체육관광부-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간의 적합성	2.319	.022
	농림수산물식품부-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간의 부적합성	1.166	.246
	농림수산물식품부-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간의 부적합성	1.855	.066
	행정안전부-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간의 부적합성	1.606	.111

3)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기능 중에서 통합이 필요한 기능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 창출-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54명(13.9%),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53명(13.6%),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통합 29명(7.5%),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통합 22명(5.7%),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와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통합 19명(4.9%), 노인일자리 창출과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통합 18명(4.6%),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통합 16명(4.1%),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통합 16명(4.1%), 노인일자리 창출과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통합 16명(4.1%),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과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통합 15명(3.9%),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와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통합 13명(3.3%),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과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통합 13명(3.3%),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통합 11명(2.8%),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통합 11명(2.8%),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와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통합 11명(2.8%)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지원기능	응답(%)
노인일자리 창출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54(13.9%)
노인일자리 창출 -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18(4.6%)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16(4.1%)
노인일자리 창출 -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16(4.1%)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11(2.8%)
노인일자리 창출 -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7(1.8%)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7(1.8%)
노인일자리 창출 -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4(1.0%)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53(13.6%)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22(5.7%)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16(4.1%)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4(1.0%)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15(3.9%)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11(2.8%)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9(2.3%)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7(1.8%)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13(3.3%)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11(2.8%)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9(2.3%)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9(2.3%)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13(3.3%)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공무원 소속에 따른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차이분석⁷⁾

구분		χ^2	유의확률
공무원 소속 (중앙 vs 지방정부)	노인일자리 창출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11.678	0.310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10.739	0.349

4) 이관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기능 중에서 이관이 필요한 기능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노동부로의 이관이 75명(19.3%)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경제부의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노동부로의 이관 42명(10.8%),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 24명(6.2%), 행정안전부로의 이관 13명(3.3%)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 10명(2.6%), 노동부로의 이관 7명(1.8%)로 조사되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관광전문가 양성은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 11명(2.8%), 노동부로의 이관 9명(2.3%)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 46명(11.8%), 노동부로의 이관 4명(1.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 55명(14.1%), 노동부로의 이관 16

7) 교차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표본이 있어야 하나 정확한 표본 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통계적 추론을 위해서는 적어도 표본 수 3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이준형, 1998). 따라서 <표 6> 통합이 필요한 정부기능 중에서 응답치가 30개 미만인 것은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명(4.1%), 행정안전부로의 이관 9명(2.3%)로 나타났다. 끝으로, 행정안전부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은 노동부로 이관이 35명(9.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이관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소관부처	지원기능	이관부처	응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 창출	노동부	75(19.3%)
지식경제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노동부	42(10.8%)
		보건복지가족부	24(6.2%)
		행정안전부	13(3.3%)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동부	7(1.8%)
		보건복지가족부	10(2.6%)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노동부	9(2.3%)
		보건복지가족부	11(2.8%)
농림수산식품부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노동부	4(1.0%)
		보건복지가족부	46(11.8%)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노동부	16(4.1%)
		보건복지가족부	55(14.1%)
		행정안전부	9(2.3%)
행정안전부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노동부	35(9.0%)
		보건복지가족부	20(5.1%)
		지식경제부	13(3.3%)

정부지원 기능 이관에 대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안전부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을 노동부로의 이관은 유의수준 0.05에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를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은 유의수준 0.1에서 각각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부지원 기능 이관에 대한 차이분석⁸⁾

구분		χ^2	유의확률
공무원 소속 (중앙 vs 지방정부)	노인일자리 창출→노동부	12.139	0.694
공무원 소속 (중앙 vs 지방정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노동부	11.035	0.725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	11.396	0.716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	17.075	0.068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노동부	19.356	0.045

5) 기능 확대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기능 중에서 확대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 창출 119명(30.6%),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112명(28.8%),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80명(20.6%),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45명(11.6%),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10명(2.6%),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8명(2.1%),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7명(1.8%),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6명(1.5%), 그리고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2명(0.5%)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기능 확대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정부지원 기능	응답(%)
노인일자리 창출	119(30.6%)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112(28.8%)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80(20.6%)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45(11.6%)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	10(2.6%)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8(2.1%)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7(1.8%)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6(1.5%)
노인전담체육지도사 · 체육지도자제도 운영	2(0.5%)

8) <표 7>의 정부지원 기능 이관 중에서 응답치가 통계적 추론 허용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공무원 소속에 따라 정부지원 기능 확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일자리 창출만이 유의수준 0.05에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부지원 기능 확대에 대한 차이분석⁹⁾

구분		χ^2	유의확률
공무원 소속 (중앙 vs 지방정부)	노인일자리 창출	33.783	.042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18.996	.157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14.761	.276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4.612	.652

6) 기능 축소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기능 중에서 축소가 필요한 기능을 조사한 결과,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108명(27.8%),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92명(23.7%),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67명(17.2%),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61명(15.7%),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44명(11.3%),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7명(1.8%),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4명(1.0%), 노인일자리 창출 3명(0.8%),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3명(0.8%)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기능 축소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정부지원 기능	응답(%)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108(27.8%)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92(23.7%)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67(17.2%)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61(15.7%)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44(11.3%)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7(1.8%)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4(1.0%)
노인일자리 창출	3(0.8%)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3(0.8%)

9) <표 9>의 정부지원 기능 확대에 대한 공무원 소속에 따른 차이분석에 있어서,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반 서비스,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그리고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은 응답치가 통계적 추론 허용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공무원 소속에 따라 정부지원 기능 축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부지원 기능 축소에 대한 차이분석¹⁰⁾

구분		χ^2	유의확률
공무원 소속 (중앙 vs 지방정부)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41.087	.000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38.642	.002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18.964	.547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33.975	.009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42.196	.000

3. 분석종합

본 연구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기능 및 지원체계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효과성, 부처별 적합성, 통합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타 부처 이관이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확대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 그리고 축소가 필요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 창출,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이 다른 정부지원 기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다른 기능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0) <표 11>의 정부지원 기능 축소에 대한 공무원 소속에 따른 차이분석에 있어서,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는 응답치가 통계적 추론 허용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일자리 창출, 지식경제부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행정안전부가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 소속여부에 따른 인식차이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그리고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 간의 부적합성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정부 공무원에 비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와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의 목표 및 기능수행 등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은 나머지 8개 정부지원 기능과 통합논의가 가장 많이 제시된 기능임을 볼 때, 다른 기능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 기능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가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와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넷째,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지식경제부의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행정안전부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을 노동부로 그리고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기능이 노동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성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른 인식차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을 노동부로의 이관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를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에 대해서 중앙정부 공무원에 비해 보다 적극적

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일자리 창출,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이 다른 정부지원 기능에 비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소속여부에 따른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소속여부에 따른 인식차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정부 공무원에 비해 이러한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축소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IV. 결 론

노인인구의 증가는 미시적 및 거시적 수준에서 혹은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확대·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행 정부지원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수행체계의 효율화 차원에서 각 중앙부처별 비체계적·중복적 사업추진의 문제점 개선 및 지원기능 체계의 재조정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 기능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통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행 정부지원 기능의 재설계 방안 또는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즉 지원기능 관련 예산규모 확대 내지는 새로운 정부지원기능의 검토 등과 같은 정부지원 기능의 확대 시각에서 벗어나, 현행 정부지원 기능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용적 관점에서 정부부처별 기능분담 재조정에 초점을 두고 정부지원 기능 재설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기능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

다. 정부지원 기능 평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은 기능상 유사성 및 중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지원 기능의 부처 적합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는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기능 이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퇴직준비프로그램을 노동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외국사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의 경우에는 보건분야에서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분야에서 각각 노인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기능을 단일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 취업 및 일자의 창출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지식경제부의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을 노동부의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및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분산된 정부지원 기능을 통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분산된 정부지원 기능 통합 및 사업수행 체계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한다면, 분산된 정부지원 기능의 통합화와 소관부처의 단일화를 위한 정부지원 기능체계의 재설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 기능이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다른 부처의 노인 취업 및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 기능을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위주로 이관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다수 복지 선진국에서도 노인 취업 및 복지 관련 기능을 단일 기능분야 혹은 단일 정부기관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기능을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위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노인일자리 창출,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을 노동부로 이관하고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성이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 기능의 효과성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은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반면,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 노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사례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직업소개소 및 노인복지공장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이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의 일자리보다는 시장지향성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정부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지향성 일자리 창출 기능의 확대·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면,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과 같은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지향하는 것이 중장기적 대응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옥희.(2008). 대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9-115.
- 박기훈.(2004).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성.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34-147.
- 박석희.(2007).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예산현안분석」, 14호.
- 박재간·손화희.(2008).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서울: 학지사.
- 이영숙.(2007). 노인의 취업성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6(2): 285-298.
- 이준형.(1998). 「통계분석」, 서울: 대영문화사.
- 임우석.(2008). 도시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1(2): 371-395.
- 지광수.(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산업경제연구」, 18(4): 1823-1836.
- 최성재·장인협.(2002).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사회와 인적자원개발」.

- 노동부.(2008). 「고령자 취업지원기관 활성화 방안 및 서비스 평가기준 마련」.
- 미래정부연구원.(2007).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부기능진단 및 재설계 방안」.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서울행정학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이」.
- _____.(2007). 「추계인구」.
- _____.(2009).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노인일자리사업 백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구축방안 자문회의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제1기(2004~2007) 노인일자리사업 백서」.
- _____.(2009). 내부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09). 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Shephard, R. J.(2000). Aging and Productivity: Some Physiologic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25: 535-545.
- U.S. Census Bureau.(2009). *U.S. Census Bureau News*.
- UN.(2009). The 2008 Revision, 2009. *The Population Prospects*.
- <http://www.dwp.gov.uk>.